

일본의 주변국 네트워크 외교

: 미중 전략경쟁 속 대만과 북한문제에 대한 딜레마*

오승희 _ 서울대 일본연구소 연구교수

— 목 차 —

- I. 서론
- II. 기존연구검토 : 네트워크 외교의 변화
- III. 일본의 주변국 외교의 특징과 한계
- IV. 미중 경쟁 시대 일본의 주변국 네트워크 외교
- V. 결론

국문초록

본 연구는 코로나19 발생과 미중 경쟁 심화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일본 정부의 주변국 네트워크 외교의 변화를 분석한다. 일본은 미중 사이에서 자국의 입장을 확인하고 주변국과의 관계에서 일본의 아이덴티티를 재규정한다. 일본은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면서도 중국, 대만과의 미묘한 관계와 일본인 납치자 문제 등 일본의 맥락을 확장된 네트워크를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적극 발신하고 있다. 한일관계 악화로 한국과 일본 사이의 네트워크 외교가 원활하게 작동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동류국가로 불분명하게 다루어지고 있지만, 일본은 북한문제에 대한 한일, 한미일 공조

* 이 논문은 2020년 통일연구원 일반연구 '남북관계 2023: 한반도 평화의 미래상 (3/5년차, 계속)-세부과제①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주변국 협력 방안' 중 위탁연구(한반도 평화에 대한 일본의 대한민국 협력 방안)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한 것임. 심사를 통해 유익한 조언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자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를 요구한다. 일본과 대만 관계는 가치공유를 강조하며 연대 강화로 나아가는 한편, 여전히 중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며 관리하려는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일본의 주변국 정책은 미국의 아시아 정책과 유사하면서도 미국을 활용하여 일본 주도의 대중국, 대 한반도 네트워크 외교도 가동하고 있다. 미중경쟁이 심화되는 국제정세 속에서 주변국에 대한 자국의 입장을 대내외적으로 연계해나가는 일본의 네트워크 외교의 변화된 특징과 딜레마를 확인한다.

주제어

일본 외교, 북일관계, 일대관계, 네트워크 외교, 가치외교

I. 서론

본 연구는 코로나19와 미중 경쟁 심화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일본 정부의 네트워크 외교의 변화를 분석한다. 그동안 한일관계와 북일관계, 중일관계 개선을 추구해온 파벌, 의원조직, 정당, 개인 등 기존 외교라인의 흐름과 함께 코로나19와 SNS 활성화로 나타나는 최근의 변화를 ‘네트워크 외교’의 특징으로 확인하고,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내각의 아시아 정책의 전망과 한국으로의 함의를 제시한다.

전후 한일관계는 한일 정부 간 공식 외교라인이 교착관계에 빠지는 경우가 많았다.¹⁾ 이러한 교착상태에서 공식 정책결정과정에는 속해 있지 않지만, 그 주변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룹, 특히 한일관계의 전략적 가치를 공유하고 한일관계 발전 및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할 의지가 있는 인적 유대 집단이 역할을 해 왔다. 대표적으로 한일의원연맹(韓日議員聯盟), 일조우호의원연맹(日朝友好議員連盟), 일조국교정상화추진의원연맹(日朝國

1) 최희식, 「전후 한일 정책커뮤니티의 생성과 변화」, 『한국과 국제정치』 31(1), 2015, p.64; 최은미, 「한일 갈등관리 메커니즘의 역사적 전개와 구조적 변용」, 『아세아연구』 63(2), 2020, p.119.

交正常化推進議員連盟)등이 있으며, 중일 간에는 일중우호의원연맹(日中友好議員連盟), 일화의원간담회(日華議員懇談會), 공명당(公明黨), 고치카이(宏池會) 등이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왔다.

그러나 한일관계의 갈등이 지속되면서 기존의 외교라인이 작동하지 않고 한일관계의 채널을 맡아왔던 기존 세력들이 한일관계 개선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접근이 더욱 어려워진 상황에서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활동을 지속하기 힘든 상황이 되었다. 또한 2021년 10월 기시다 내각이 등장하면서 아시아 외교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함께 나타나고 있다.

기시다 총리의 개인적인 성향은 춘풍접인(春風接人)과 천의무봉(天衣無縫)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것과 같이 좀처럼 화를 내지 않는 온건보수 성향의 ‘비둘기파’로 평가받고 있다.²⁾ 기시다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에서 최장수 외상(2012.12~2017.08)을 역임했고, 짧지만 방위상(2017.07~2017.08)도 겸임하며 아베 내각의 외교 안보 정책을 담당했다. 또한 자민당 정조회장(2017.8~2020.9)으로서 아베 정권의 외교기조를 유지해나가는 데 힘을 실어 주기도 했다. 기시다가 2012년부터 회장으로 있는 고치카이는 1957년 이케다 하야토(池田勇人)를 후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결성된 자민당 내 파벌이다. 요시다 노선을 계승한 보수 본류로 오히라 마사요시(大平正芳), 미야자와 기이치(宮澤喜一) 등의 총리를 배출하며 미일관계를 강화하면서 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도 중시해왔다. 기시다는 북한에 대해서는 강경하고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주도했으며, 특히 중일관계 개선에 힘써 ‘새로운 시대의 중일관계’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2) 오승희, 『열린 자민당, 새로운 일본은 가능한가?』 『교수신문』, <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77584> (검색일:2021.11.1.)

그러나 코로나 19로 인해 중일관계 개선 움직임이 멈추고,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OIP)이 구체화되며 중국 견제의 국제질서 재편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일본-인도-호주를 연결하는 민주주의 동맹 네트워크가 증시되면서 대만, 홍콩, 위구르 문제 등이 언급되며 중국과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에 2015년 합의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공은 한국에 있다”며 한국 측에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북한에 대해서는 핵, 미사일 개발의 완전한 포기과 모든 납치피해자의 즉시 일괄 귀국을 목표로 하며 더욱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방위력을 강화하고 개혁을 추진하며 각종 제도개혁과 법제개혁을 이루어나가는 등 새로운 일본형 자본주의와 새로운 일본으로의 변화도 ‘약속’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외교환경의 변화와 미중경쟁의 심화로 FOIP가 구체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외교정책은 어떠한 변화와 특징을 보이고 있는가? 본 연구는 2019년 이후 나타나는 일본의 한반도와 중국에 대한 기존의 네트워크 외교의 변화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장에서는 네트워크 외교 개념을 정리하고, 일본의 네트워크 외교의 변화를 분석할 주요 개념들을 확인한다. III장에서는 일본의 주변국 네트워크 외교의 역사와 특징 그리고 한계를 살펴본다. IV장에서는 기존 일본 네트워크 외교의 변화모습을 대만과 북한 문제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V장에서는 오늘날의 일본 외교의 방향과 목적을 확인하고 향후 한일관계와 북일관계로의 함의에 대해 논의한다.

II. 기존연구검토 : 네트워크 외교의 변화

본 연구는 한국, 북한, 중국, 대만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집단, 관료, 단체 등 다양한 행위자의 공식, 비공식 활동을 ‘네트워크 외교’ 개념으

로 설명한다. 네트워크 외교란, 글로벌리제이션과 정보 기술 발달로 변화된 국제관계 속에서 정부 또는 비정부의 다양한 행위자들이 노드(node)로 참여하고 이들 간의 관계가 링크(link)로 연결되어 구축되는 외교활동을 의미한다.³⁾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 기업, 비정부 기구(NGO) 및 개인 간의 지속적인 연결을 통해 수행된다.⁴⁾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 간의 협력을 도모하고 연결하고자 하는 다양한 행위자의 다차원적 협력방안을 확인하고 그 특징과 한계를 분석한다.

일본의 네트워크 외교는 기존 연구에서 다양한 명칭으로 연구되어왔다. 정치네트워크⁵⁾, 정책커뮤니티⁶⁾, 한일인맥⁷⁾, 지한파(知韓派), 지일파(知日派), 비정식접촉자⁸⁾, 비공식 외교라인⁹⁾ 등으로 나타난다. 정치냐 정책이나, 공식이나 비공식이나 등 각각의 명칭들이 초점을 둔 부분은 다소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일본의 공식 외교관계를 보완하고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작동되어왔다.

최희식은 정책 커뮤니티에 주목하여 한일관계의 전략적 가치를 공유하고 관계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정책결정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상호 인적 유대를 지닌 공동체로 규정한다.¹⁰⁾ 비정부 교류단체에 참여하는 다양한 개인

3) 오승희, 「아베 정권의 아시아 네트워크 외교: 고치카이, 공명당, 의원연맹」, 『정치정보연구』 22(3), 2019, p.331.

4) K. L. Corrie,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using technology in network diplomacy”, *Digital Diplomacy*, Routledge, 2015, pp.159~161.

5) 박철희, 「정치네트워크의 부침으로 본 한일 협력과 갈등」, 『일본비평』 12, 2015, pp.197~198.

6) 최희식(2015), pp.55~56.

7) 박진희, 「韓·日 국교수립 과정에서 ‘韓·日인맥’의 형성과 역할」, 『역사문제연구』 제 9호, 2003, pp.134~136.

8) 안소영, 「한일관계와 ‘비정식접촉자(非正式接觸者)’: 국교정상화 성립 전후로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 『한국정치외교사논총』 33.1, 2011, pp.31~35.

9) 최은미(2020), pp.115~117.

10) 최희식(2015), p.55.

즉, 전현직 정치인, 경제인, 전직 관료, 학자, 언론인, 시민운동가 등의 인적 유대를 제도화한 것으로, 지한파, 지일파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사용한다.¹¹⁾ 한일관계의 경우 한일의원연맹, 한일협력위원회, 한일친선협회, 한일포럼 등 다양한 정치네트워크가 존재해왔다.¹²⁾ 또한 고치카이와 공명당은 중국과 아시아 중시 외교를 표방하며 중일관계의 민간 협력, 인적 교류 및 네트워크 형성에 많은 역할을 담당해왔다.¹³⁾

일본의 아시아 주변국 외교는 전후 초기 정치중심, 인물중심의 냉전적 배경의 영향이 강했으나 최근에는 다영역, 다차원, 다요인적 네트워크적 접근이 활발해지고 있다. 1980년대까지 정권 핵심세력을 중심으로 한 방사선 형태의 네트워크는 1990년대부터 다원적이고 병렬적인 네트워크로 변형되어왔다.¹⁴⁾

한일 네트워크 외교는 국교정상화 과정에서 단절된 대화를 연결하고, 한일 협력이 가능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제시해왔다.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와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등 한일관계 1.0, 한일관계 2.0의 계기를 마련해온 주요한 인적, 아이디어의 교류의 장이 되어왔다. 정부영역에서 민간영역으로, 공식 외교에서 공공외교로 외교의 대상과 목적 그리고 영향력이 확장되어왔다.

박철희는 냉전적 배경을 안고 출범한 한일협력위원회, 한일의원연맹, 한일친선협회가 점차 개인에서 단체 간의 교류로 제도화되면서 점에서 선으로, 정치에서 다영역, 다차원, 다원적 협력으로, 개인에서 단체로, 정치네트워크의 명맥을 이어갔다고 분석했다.¹⁵⁾ 한일포럼은 탈냉전기 한국과 일본의

11) 최희식(2015), p.69.

12) 박철희(2015), p.198.

13) 오승희(2019), pp.332~345.

14) 박철희(2015), p.198.

15) 박철희(2015), p.205.

위상과 이해를 충실히 반영하는 다층적, 다원적 협력의 네트워크로, 정치인 네트워크, 지식인 네트워크, 문화인 네트워크, 언론인 네트워크가 병렬적으로 존재한다. 중층적 네트워크 시대에 수직적 분업의 논리에서 벗어나 점차 수평적 경쟁 논리를 강조해왔다.¹⁶⁾ 한일 간의 대등하고 다차원적인 협력의 모색은 한일 간 가치공동체의 창출을 요구하고 있다. 소통 채널만으로는 부족하다. 갈등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한일 협력의 장기적 비전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¹⁷⁾

정책커뮤니티는 한일 간 협력의제를 창출하고, 이를 양국 정부에 제안하는 기능을 수행했다. 경제협력에서 한일의원연맹이 측면지원 역할을 한 것이다. 권익현-세지마 류조(瀨島龍三)의 비공식 외교라인에 의해 ODA 18.5억 달러, 일본 수출입은행 지원 21.5억 달러 등이 합의되었고,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총리의 방한이 결정되면서 한일 안보경협 문제가 일단락되었다.¹⁸⁾

월드컵 공동개최 구상, 역사 공동연구위원회 설치 제안, 한일 안보대화 및 교류, 제주성명과 서울성명을 한일 파트너십 선언의 전사(前史)로 하는 한일포럼의 포괄적 협력의제가 있었기 때문에 1998년 3월 정부수립 이후 7개월여 만인 10월에 김대중 대통령의 한일 파트너십 선언이 가능했다.¹⁹⁾ 한일 간 갈등관리와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에 한일 정책커뮤니티가 중요한 역할을 해온 것이다.²⁰⁾

16) 박철희(2015), p.212.

17) 박철희(2015), p.223.

18) 고모다 마유미, 「한일 '안보경협' 분석: 역사적 전개와 이론적 함의」,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13), pp.168~183; 최희식(2015), p.64.

19) 최희식, 「김영삼 정부 시기 한일 비정부 교류 연구: 신시대 한일관계 비전 제시를 향한 도정」, 『일본연구논총』 39호, 2014, pp.14~20; 최희식(2015), pp.74~75.

20) 최희식(2015), pp.75~78.

그러나 특정 인물에 의존하고 고령 세대를 중심으로 작동되어온 네트워크의 갈등조정 기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다는 한계를 확인할 수 있다.²¹⁾ 청와대와 관저 중심의 정책결정 프로세스, 국민 여론과 대일/대한 감정, 정책네트워크의 고령화, 이명박 대통령 독도방문 이후 관계 악화의 사례와 같이 한일 갈등상황에서는 그 역할이 현저하게 약화되었다.²²⁾ 최근에는 한일관계 피로현상이나²³⁾, 강창일 주일대사가 부임 이후에도 일본 총리와 외무상을 대면하지 못하고 있는 정세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기존의 협소한 소그룹 외교에서 벗어나 한일 간의 대등하고 다차원적인 협력을 모색하여 한일 간 가치공동체 창출을 향한 다각적 네트워크 외교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왜 양국이 협력을 지속해야 하는가에 대한 장기적 비전을 제시하지 않는 한, 인적 네트워크에만 의존하는 기존의 방식으로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코로나19와 불확실성이 증대된 시대에 기존의 소수의 고위급 중심의 대면 외교는 점차 변화해가고 있다. 이제까지의 소그룹외교에서 네트워크 외교로의 확장 및 전환이 나타나고 있다. △행위자의 수, △구조, △형태, △투명성, △주요 목적에 따라 비교해보면, 기존의 집단 네트워크는 제한된 행위자들이 위계적 질서로 구축된 서면 형태의 비공개적인 합의 문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반면, 네트워크 외교는 다양한 행위자들이 보다 수평적인 관계의 구조 속에서 주로 발언을 중심으로 비공식적이면서도 공개적인 다층적 양자 간 관계들이 증가하고 있다.²⁴⁾ 특히 온라인이 가진 유연성과 개방성,

21) 박철희(2015), p.198.

22) 최희식(2015), pp.77~79.

23) 최희식(2015), p.79.

24) C. Wei, "Between club diplomacy and network diplomacy: Exploring the diplomatic role of cities in China since 2012," *The Hague Journal of Diplomacy* 8(3-4), (March, 2021), pp.281~287.

투명성은 네트워크 외교의 특성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일본의 소그룹 중심 외교에서 특정 목적을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 외교로의 전환과정을 대만과 북한 문제를 중심으로 집중 분석한다. 구조와 행위자 차원, 투명성과 공개성, 특정 목적의 이슈와 아이덴티티 전환이라는 점에서 나타나는 복합 네트워크 외교로의 전환과정을 살펴보고, 미중 경쟁 속 대만과 북한문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일본의 정체성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한다.

III. 일본의 주변국 외교의 특징과 한계

주변국인 한반도와 중국에 대한 일본의 네트워크 외교는 주요 인물들 간의 국가 방문을 비롯한 정부 간 교류와 민간영역을 중심으로 한 비정부 교류, 그리고 학계를 중심으로 전문가들로 구성된 네트워크와 민관 협의체로서의 1.5트랙의 교류 등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동안 대표적인 교류는 정상 회담과 실무회담, 그리고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한 사절단 파견을 통해 네트워크의 존재를 확인하고 친서 교환 등을 통한 상징적 외교 활동으로 표현되는 오프라인 대면 교류 형식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 장에서는 일본의 아시아 외교의 특징과 한계를 살펴보고, 소그룹외교에서 네트워크 외교로의 변화 양상을 확인한다.

1. 개인 및 소집단 중심외교

우선 한일관계의 주요행위자는 II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일 간 정계를 대표하는 한일의원연맹, 재계와의 연결고리 성격을 지니는 한일협력위원회, 지방과 청소년 교류에 집중하는 한일친선협회, 여론 주도층의 합의체인

한일포럼 등이 있다.²⁵⁾

북한과 일본은 외교관계가 수립되지 않은 가운데, 1991년 1월, 수교 협상 본회의가 시작되었다. 1992년 11월 제8차 회의에서 중단되었다가 1999년 12월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총리의 방북 이후 수교 협상이 재개되었다. 특사외교와 적십자사가 북일 네트워크에서 주요한 행위자였고, 납치자 문제와 북일국교정상화를 통한 불행한 과거의 청산 문제가 주요 쟁점이었다.

북한의 경우 적십자와 특정 개인을 통한 접촉이 이루어져 왔다. 정부 차원에서 가네마루 신(金丸信) 방북단의 방문을 통해 국교정상화 및 납치자문제 등이 논의되었고, 자민당은 물론 무라야마 단장을 필두로 하는 초당파 방북단이 파견되었으며,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총리의 북한방문이 있었다. 또한 개인을 중심으로 한 안토니오 이노키(猪木寛至) 일본 참의원이 평양을 방문하였으며, 가네마루 신고(金丸信吾)가 방북단과 함께 일본을 방문한 바 있다.

또한 일본 내 조총련은 북한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에 일본 국민과의 우호활동을 주문했다. 2020년 11월 1일 김정은 위원장은 조총련의 ‘총련분회대표자대회’ 참가자들을 격려하는 <축하문>을 보내면서 “일본 인민들과의 우호친선 활동을 능동적으로 벌여 재일 동포사회의 존립과 발전에 유리한 대외적 환경을 마련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북일 간 여러 가지 의제 중에서도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는 북일국교정상화 교섭과정에서 점차 중점의제로 부각되었으며 국교정상화 논의의 선결 문제로 자리하게 되었다.²⁶⁾ 고이즈미, 아베,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기시다

25) 박철희(2015), p.221.

26) 신정화, 「냉전 이후 일북 관계의 시대별 주요 특징: 동북아시아 정세, 국가목표, 국내정치세력」, 『일본공간』 19, 2016, pp.190~191.

모두 납치자 문제의 해결을 주장해왔으며, 납치문제에 관한 미일 연계를 강조하며 조기해결을 위해 점차 논의를 확장해가며 주요 의제로 거듭나고 있다.

중국과 일본은 전후 냉전초기 관계를 구축하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경제 민간 단체와 사회적 법인들이 중심으로 관계를 형성해왔다. 1972년 이전에는 중화인민공화국과 경제계를 앞세운 정경분리외교를, 1972년 이후에는 중화민국과 외교관계가 단절되면서 민간 경제 분야를 앞세워 관계를 수립해오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과 일본은 대국관계를 설정하며 전략적 호혜관계를 형성해왔으며, 중화민국에 대해서는 최근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임을 재확인하며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1972년 중일국교정상화 당시 일본 내 친중국파와 친대만파는 중일 관계 전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대표적인 친중국파로는 <일본국교회복축진의원연맹(日中国交回復促進議員連盟)>과 <일본중국우호협회(日本中国友好協會)>가 있다. 1950년 10월 설립된 <일본중국우호협회>는 일본과 중국 쌍방의 국민의 우호관계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²⁷⁾ 1966년 중국의 문화대혁명을 지지했던 주류 단체가 일중우호7단체(일본중국우호협회, 일중우호의원연맹, 일중경제협회, 일중협회, 일본국제무역촉진협회, 일본중국문화교류협회, 일중우호회관)를 구성하였다. 중일 양국 국민의 상호 이해와 상호신뢰를 심화하고 우호관계를 중시하고 아시아 및 세계평화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²⁸⁾

1972년 11월, 중국의 라오청즈(廖承志)와 일본의 다카사키 다츠노스케(高橋達之助)를 주축으로 <일중경제협회(日中經濟協會)>가 설립되어 중일 경제관계의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일중우호의원연맹(日中友好議員連盟)>은

27) 오승희(2019), p.343.

28) 오승희(2019), p.343.

자유민주당, 민주당, 일본유신회, 일본공산당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되어 중화인민공화국과의 우호관계의 촉진을 목적으로 활동했다. 1975년 9월 29일 설립된 <일중협회(日中協會)>도 중일 우호협력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²⁹⁾

공명당은 다케이리 요시카츠 위원장 지도하에 1970년 12월 <일중국교 정상화국민협의회>를 발족했다. 그리고 1970년 12월 9일, <일중무역촉진의 원연맹>을 해산하고 <일중국교회복촉진위원연맹>이 결성되었다.³⁰⁾ 회장은 후지야마 아이이치로(藤山愛一郎)로 자민당과 공산당까지 포함하여 초당파 379명이 참가하였다. 야당인 사회당은 1970년 10월에 제5차 방중단을 파견하여 1971년 1월 <일중국교회복국민의회>를 결성했다. 사회당은 하나의 중국의 입장을 분명하게 내세웠고, 공명당은 일본-대만조약의 파기를 강력하게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일중국교회복의원연맹>에서는 자민당을 포함한 설립선언에서 대만정부를 유일한 중국의 합법정부로 하는 정부의 입장은 국민의 현재와 장래의 이익에 반하며 대만문제에 대한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 총리의 자세는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하였다.³¹⁾

한편 친대만파의 활동은 <일화협력위원회(日華協力委員會)>를 통해 전개되었다. <일화협력위원회>는 1957년 3월 11일 일본과 대만의 지식인들이 정기적으로 협의하고 정치, 경제, 문화교류의 협력관계를 추진하기 위해 결성되었다. 1970년 7월 8일 제15차 일화협력위원회 총회를 통해 공산주의 중국에 대한 견제를 위해 일본, 대만, 한국의 삼자협력을 강조했다. 반공주의에 기반하여 미국을 비롯한 자유세계와의 협력을 강조했다.

<일화의원간담회>는 일본 국회에 있는 초당파 의원 연맹이다. 일화관계

29) 오승희(2019), pp.343~344.

30) 井上正也, 『日中国交正常化の政治史』, 名古屋大学出版会, 2010, p.406.

31) 井上正也(2010), p.406.

의원간담회(日華關係議員懇談會)에서 발전하였으며 일본과 중화민국과 단교 이후인 1973년 3월 14일 양국 간의 국회의원 교류를 위해 설립되었다. 2019년 5월 기준 소속의원은 287명으로 회장직은 히라누마 다케오(平沼赳夫)에 이어 2018년부터 후루야 게이지(古屋圭司) 중의원 위원이 맡고 있다.

아베 정권에서는 중일관계의 신시대를 구축하겠다는 뜻을 표명하며 중일관계 개선조치들이 이루어졌다. 중일관계 개선에는 특히 기시다 외상과 공명당의 역할이 주요했으며, 아베 총리의 친서를 전달하는 특사 외교가 이루어졌다. 아베 총리는 특히 기시다 외상이 당시 중일 관계를 위해 분골쇄신하였음을 강조하였다.³²⁾ 아베 총리가 일본 총리로서 7년 만에 공식 방문을 하고 리커창 총리가 중국의 국무원 총리로서 일본을 8년 만에 방문하는 등 중일관계가 ‘정상 궤도’로 돌아가 중일관계의 신시대를 열기를 기대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³³⁾

또한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간사장을 필두로 한 니카이파 역시 중국과의 관계를 중시했으며, 니카이파의 도움을 받고 있는 스가 내각에서도 중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목소리는 존재했다. 코로나 19로 인한 시진핑 주석의 방일이 취소되고 중일 관계 개선 분위기는 중단되었다. 게다가 중국 견제의 국제환경이 조성되는 가운데 새로운 중일관계 개선은 어려워졌으나, 중일 관계 악화로 전환되는 것을 경계하고 관리하는 분위기가 일본과 중국 양측에서 나타나기도 했다.

기시다 정권이 출범하면서 중국에서는 그동안 ‘대중 비둘기파’로 평가되어 온 기시다에 대한 기대와 동시에 인도태평양을 중심으로 대중 견제 기조가 형성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와 경고의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다. 중국이

32) 오승희(2019), p.336.

33) 오승희(2019), p.336.

기시다의 당선에 ‘그나마 다행’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해서는 안되는 조치’라든지 ‘신 중일전쟁’을 언급하며 중국에 대한 관계 악화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대만과의 관계 개선으로 인한 ‘하나의 중국’에 대한 해석의 충돌, 센카쿠/다오위다오에서의 충돌 등 미중 경쟁 속 중일 관계 악화가 나타나는 한편, 2022년 중일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이하여 중일 협력의 과제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대만과 중국 모두로의 접근을 고려하는 일본의 대중국 네트워크 외교는 아베를 필두로 한 친대만 네트워크와 고치카이와 공명당 등의 친중국 네트워크를 복합적으로 활용하며 중층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2. 양자 중심의 배타적 가치외교

일본 정부는 북한이 올해 2021년 1월 22일 평안북도 구성에서 서해상으로 순항 미사일 2발 발사, 3월 21일 평안남도 온천에서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2발 발사, 3월 25일 함경남도 함주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신형전술유도탄 2발 발사, 9월 11일~12일 신형 장거리 순항 미사일 발사, 9월 15일 평안남도 양덕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등을 발사했음을 확인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한일, 한미일 협력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일본 아베 내각은 2013년 12월 처음으로 국가안보전략(NSS)을 각의 결정하면서 자유, 민주주의, 기본적 인권의 존중 그리고 법의 지배와 같은 보편적 가치나 룰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유지, 옹호하는 것이 일본의 국익이라고 표현했다. 북한과 중국으로부터의 위협은 일본의 군비강화를 정당화하는 근거이며, 불확실하고 불투명한 안보위협에 대한 일본의 안보태세 강화와 자위대의 역할을 제한하는 헌법 개정 필요성의 근거로 제시된다. 강한 일본을

위한 아시아의 타자화³⁴⁾는 일본 대내적으로 안보법제를 마련하고 집단적 자위권을 강화하는 자기정당화로, 대외적으로는 국제연대의 강화와 동류그룹(like-minded countries) 형성의 근거로 활용되어 왔다.

일본은 중국과는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대만과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고 규정한다. 일본 정부는 대만과의 관계에 대해 “대만은 일본에 있어서 자유, 민주주의, 기본적 인권, 법의 지배라는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고 긴밀한 경제관계와 인적 왕래를 가진 매우 중요한 파트너이자 소중한 친구다.”라고 규정한다.³⁵⁾ 대만문제는 중국의 핵심문제로 대만과의 가치연대는 중국에 대한 견제로 이해되며 중일 간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이다.

또한 한국과의 관계에서는 과거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공유하는 국가로 주로 언급되어 왔다.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이웃이며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³⁶⁾에서 “한국은 일본에게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등의 기본적인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³⁷⁾ 그런데 역사문제 등으로 인한 한일 갈등이 첨예해지자, 가치공유에 대한 언급이 의도적으로 제외되었다. 2021년 외교청서에서는 “한국은 중요한 이웃나라이며 한일 양국은 1965년 국교정상화시 체결된 한일기본조약, 한일청구권경제협력협정 및 기타 관련 협정의 기초 위에서 긴밀한 우호협력관계를 구축해 왔다.”고 하여 가치공유 부분이 언급되지 않았다. 일본 총리의 소신표명 연설에서도 한국에 대한 수식어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이는 민주주의를 비롯한

34) 오승희, 「아베 내각의 아시아 정책—강한 일본을 위한 아시아의 타자화—」, 『일본연구』 75, 2018, p.1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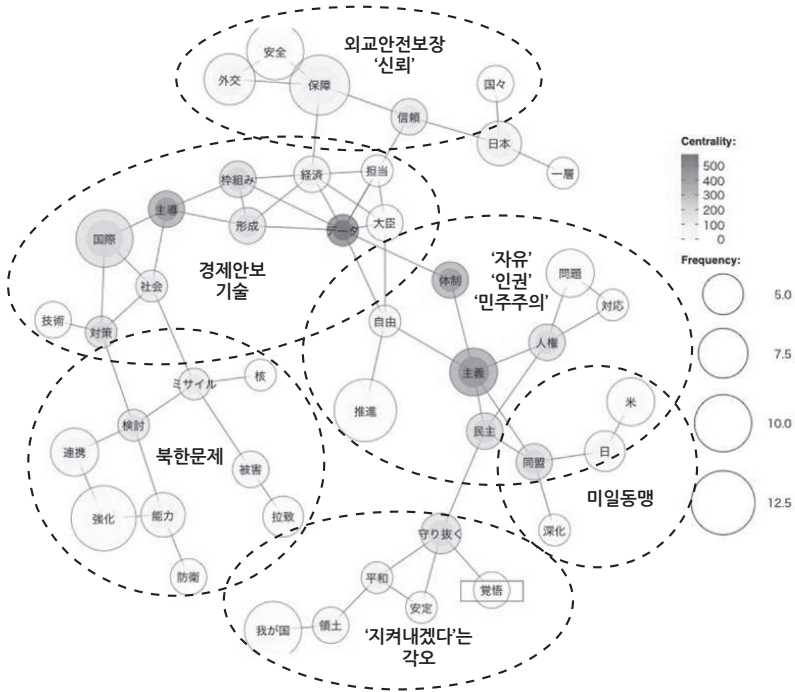
35) 外務省, 「外交青書」, https://www.mofa.go.jp/mofaj/gaiko/bluebook/2021/pdf/pdfs/2_2.pdf (검색일: 2021.12.28)

36) 外務省, 「外交青書」, https://www.mofa.go.jp/mofaj/gaiko/bluebook/2008/pdf/pdfs/2_1.pdf (검색일: 2021.11.1.)

37) 外務省, 「外交青書」, https://www.mofa.go.jp/mofaj/gaiko/bluebook/2013/pdf/pdfs/2_1.pdf(검색일: 2021.11.1.)

가치를 공유하는 동류그룹에 대한 판단의 자의성을 보여준다.

〈그림 1〉 기시다 내각의 외교안보정책³⁸⁾



기시다 내각의 외교안보정책에서도 자유, 인권, 민주주의 등 가치를 강조하는 가운데 신뢰를 강조하는 외교안보와 기술을 포함하는 경제안보의 강조, 국민과 영토를 지켜내겠다는 각오 등이 나타나고 있으며, 미일동맹에 대한 강조와 함께 핵문제와 납치자 문제를 포함하는 북한문제가 크게 위치해있다.

38) 岸田文雄公式サイト, “「信頼」と「3つの覚悟」に基づいた外交・安全保障”, [https://kishida.gr.jp/wp-content/uploads/2021/09/20210913-記者発表\(外交\).pdf](https://kishida.gr.jp/wp-content/uploads/2021/09/20210913-記者発表(外交).pdf)의 동시발생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 결과(검색일: 2021.10.30.)

민주주의를 비롯한 가치를 강조할수록 그 가치의 상대성에 기반한 이념의 진영화가 뚜렷해지는 것도 가치외교의 특징이자 주의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왜 일본의 보수주의가 강화되고 있는가에 대한 고찰들에서 다루는 바와 같이,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이념의 양극화와 민주주의의 적에 대한 논의에서 민주주의의 딜레마에 상응하는 가치외교의 딜레마를 확인하게 된다.

IV. 미중 경쟁과 일본의 주변국 네트워크 외교

1. 대만 문제와 북한 문제를 둘러싼 협력 모색

2021년 현재 국제질서는 미중경쟁의 심화 속 대만, 동중국해, 남중국해의 핫스팟에서의 충돌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지역 내 질서 변화를 필요로 하는 대만의 움직임이 미중 간 갈등의 초점이 되고 있다. 중국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신청한 이후 대만도 CPTPP에 가입신청을 하면서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며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에 전투기를 보내 위협했다. 여기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한국의 종전선언 논의 역시 부상하며 한반도를 둘러싼 지역 및 세계 질서가 요동하고 있으며 새로운 질서 구축을 위한 경쟁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중 경쟁 구조 하에서는 누가 총리가 되더라도 행위자에 상관없이 미국 측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대중국 견제의 자세를 취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다수이다. 2021년 9월 15일 미국-영국-호주를 연결하는 오키스(AUKUS)의 출범이 공식 발표되었다. 미국과 영국이 호주의 핵잠수함 건조를 지원하면서 사실상 3자 안보동맹의 성격을 내세우고 있다.³⁹⁾ 또한 9월

39) The White House, "Joint Leaders Statement on AUKUS",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1/09/15/joint->

24일 미국-호주-일본-인도를 연결하는 쿼드(QUAD)가 첫 번째 정상회의를 대면으로 개최하면서 인도 태평양 질서, 인프라 협력, 통신 및 기술 협력, 우주 공간 규범 협의 등 포괄적인 협력의 의지를 분명히 했다.⁴⁰⁾ 여기에 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를 연결하는 파이브아이즈(Five Eyes)의 확대 구상까지 고려하면 3자, 4자, 5자 플러스알파의 다양한 복합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미국의 대중국 정책이 본격적으로 운용되기 시작하였고, 일본은 인태지역에서의 미국과의 협력을 보다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일본의 아시아 정책 역시 미일 간 연계가 강화된 구조 하에서 다루어지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취임 이후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 등 인근 지역의 과제에 긴밀히 대응해 나가는 것, 납치 문제 해결을 향한 제휴를 확인했다고 설명하고, 서로를 ‘조’, ‘후미오’로 부르기로 했음을 확인했다. ‘도널드-신조’, ‘조-요시’에 이어 이름을 부르며 친밀감을 대외적으로 확인시키는 것이 미일 우호의 상징처럼 되어왔다. 비공식적으로도 친밀하다는 친구와 우정의 메시지를 통해 양국관계의 중요성과 건재함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다.

한편, 오커스-쿼드-파이브아이즈로 연결되는 미국과 일본의 중국 견제 구상에 대응하여 중국과 러시아는 ‘해상연합2021’ 훈련을 실시하였다. 일본을 쓰가루(津輕) 해협과 오스미(大隅) 해협으로 둘러싸는 봉쇄 가능성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었다.

중국과 러시아의 연대와 함께 중국의 유엔 가입 50주년(1971.10.25)을 맞

leaders-statement-on-aukus/ (검색일: 2021.10.1.)

40) The White House, “Joint Statement from Quad Leaders”,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1/09/24/joint-statement-from-quad-leaders/>(검색일: 2021.10.1.)

이하에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대만의 지위 변화를 지지하는 미국과 일본의 시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2021년 4월 미일 정상회담에서는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과 ‘양안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고 발표했다. 일본은 방위백서에 ‘유사시 대만 문제에 개입할 수 있다’고 해석될 수 있도록 하였고, 바이든 대통령은 CNN방송의 타운홀 행사 중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때 미국이 방어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게 할 책무가 있다”고 대답했다.

미일 협력의 주요 의제로서 일본이 특히 납치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스가 정권에서도 그러했듯이 기시다 정권에서도 바이든 정권으로부터의 납치문제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또한 북한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일 협력이 강조되고 있다. 한국에 대한 동류그룹으로의 판단은 미뤄두면서도 북한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은 필요하다는 전략적 인식이다.

와시오 에이이치로(鷲尾英一郎) 외무 부대신: 납치문제에 대해서는, 스가 정권의 최대중요 과제이며, 해결을 향해서 우리나라 자신이 주체적으로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략) 북한으로의 대응에 관해서는, 일-미-한이 긴밀히 제휴해 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달 G7 외무장관 회합 시에 행해진 한미일 외무장관 회합에서는 블링컨 국무장관, 정 외교부장관과의 사이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하고, 북한에 대해 유엔 안보리 하에서의 의무를 따를 것을 요구하는 것에 의견을 모은 바 있습니다. 또, 정권의 최대중요 과제인 납치문제에 대해서는, 모테기 대신으로부터 양 장관의 이해와 협력을 요구해 재차 양 장관의 지지를 얻은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로서는 북일 평양선언에 의거 납치, 핵, 미사일 등 여러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고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국교 정상화를 지향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향후, 미국의 정책 검토 결과를 토대로 하여, 대북정책을 구체적으로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 이러한 우리나라의 생각에 대해서도 계속 이해를 얻으면서, 미일, 일미한 간 긴밀히 제

휴해 나가고자 합니다.⁴¹⁾

일본은 일본만의 의제로 치부되었던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를 국제공론화하며 미국, 한국, 중국과의 협력이 필요한 의제로 발신하고 있다. 북한문제에 대한 주변국 협력 외교를 구상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제환경 속에서도 일본의 외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일본이 주도하는 네트워크 외교를 작동해오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환경 속 일본 외교의 자주적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2. 온오프라인 미디어를 활용한 공개적 지지

일본 주요 정치인들은 온라인을 통해 정치가들의 활동을 홍보하고 공식적/비공식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는 창구로 활용하고 있다. 아베 신조, 고노 다로, 기시다 후미오 등 일본 주요 정치인들이 트위터를 매개로 하는 네트워크를 형성 및 유지하며, 정책 아이디어를 적극 발신하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활용하고 있으며, 2021년 10월 17일 아베 신조 전 총리는 유튜브를 개설하여 선거운동을 하며 적극적으로 자신의 생각과 정책을 확산하고 있다.⁴²⁾

아베 전 총리와 그의 동생인 방위상 기시 노부오(岸信夫)는 친대만파로 분류된다. 기시 방위상은 <일화의원간담회>의 간사장을 맡고 있다. 2016년 5월 민진당 차이잉원(蔡英文) 정권이 들어서면서 대만과 일본의 아베 신조

41) 国会會議録, 「北朝鮮による拉致問題等に関する特別委員会」, 第204回国会 衆議院 北朝鮮による拉致問題等に関する特別委員会 第3号 令和3年6月11日, No.057, No.075, <https://kokkai.ndl.go.jp/#/detail?minId=120405253X00320210611¤t=1> (검색일: 2021.10.8.)

42) あべ晋三チャンネル, https://www.youtube.com/channel/UCvTUIYhJ6p_OOSpvNSyEgKQ (검색일: 2021.10.30.)

정권의 관계가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으로 기대했다. 차이 부총리는 총선을 앞둔 2015년 10월 일본을 방문했고, 그 자리에서 아베 총리를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이 자리에 아베 총리의 동생인 기시 노부오 의원이 직접 참석한 바 있다.⁴³⁾ 기시 방위상은 2020년 7월 리덩후이(李登輝) 전 대만 총통 서거 때도 모리 요시로(森喜朗) 전 총리가 이끄는 일본 대표단의 일원으로 대만을 방문하여 차이 총통을 만난 바 있다. 리 전 총통은 2007년 6월 야스쿠니 신사를 방문해 형의 위패를 참배한 일로 상당한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대만과 일본은 의심할 바 없이 같은 나라였다”고 밝히는 등 친일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일본이 대만을 통치하면서 사법과 행정 분립을 이뤘고 근대화에 도움을 줬다”는 등 일본의 대만 식민 지배를 찬양하는 발언도 남겼다. 차이잉원 총통은 리덩후이 전 총통과 마찬가지로 대만과 중국은 특수한 국가 간 관계로 규정하는 ‘양국론’(兩國論)에 기반하여 대만 독립을 주장하고 있으며, 일본과의 우호, 협력을 강조해오고 있다.⁴⁴⁾

스가 내각에 기시 방위상이 임명되자 중국 정부는 “중국은 일본과의 협력 강화를 바란다”며 “일본이 대만과 공식적인 관계를 발전시키지 않기를 바란다”는 대변인 성명을 내놓았다. 이번 기시다 내각에서도 방위상으로 유임됐다. 경제안보담당장관 고바야시 다카유키(小林鷹之) 역시 친대만파로 알려져 있어 대만의 CPTPP가입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SNS를 통해 대만과의 우호 관계를 가시화하고 있는데, 2021년 4월 28일 아베 신조 전 총리는

43) Kawashima Shin, “The Japanese Government’s Shifting Rhetoric about Taiwan and Its Significance”, https://theasanforum.org/10882-2/?fbclid=IwAR33Zoem_IHYDzUWVlRQeWHYkcQR7RjVXvYiGvpPip5icXqu8UlrTcWh9k#2(검색일: 2021.10.30.)

44) 주간 동아, “친일 노선 본격화 차이잉원 대만 총통”, <https://weekly.donga.com/3/all/11/536955/1> (검색일: 2021.10.30.)

트위터에 “오늘 디저트는 파인애플. 너무 맛있어 보인다.”⁴⁵⁾라는 트윗을 올리기도 했다.

〈그림 2〉 SNS를 통한 대만과의 공개적 연계⁴⁶⁾



얼핏 보면 파인애플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는 아베 전 총리의 사진만 보이는데 클릭해보면 나오는 전체 사진에서는 하단에 “대만 파인애플”이라고 크게 쓰여 있다. 일주일 전인 4월 21일에는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하러 간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더 이상 총리자격은 아니지만, 야스쿠니 문제에 대한 자신의 신념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SNS를 적극 활용하는 차이잉원 총통 역시 백신외교 등 대만과 일본의 우호관계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정조회장은 차이잉원 총통과 화상회의를 갖는 사진을 트윗에 올리고, 이를 아베가 리트윗하며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두 사람의 회담. 세계가 주목”이라고 의견을 달며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45) “今日のデザートはパイナップル。とっても美味しそう。”

46) Twitter, @KishiNobuo, <https://twitter.com/KishiNobuo>; Twitter, @AbeShinzo, <https://twitter.com/abeshinzo> (검색일: 2021.10.30.)

대만 문제에 대한 일본의 관심은 이미 공식적인 외교관계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 앞서 살펴본 2021년 4월 미일정상회담 이후 발표된 공동성명에서 ‘대만’이 명기된 것은 1969년 11월 리처드 닉슨 대통령과 사토 총리의 공동성명에서 “대만지역에서 평화와 안전의 유지도 일본의 안전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라고 언급된 이후 52년만이었다. 대만지역이 미일안전보장조약의 적용대상인가 아닌가에 대한 문제를 포함하여 대만문제를 둘러싼 일본의 외교안보정책은 온오프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라디오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일본 정부는 스스로 북한용 라디오 방송을 운영함과 동시에 민간단체, 특정 실종자 문제 조사회에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북한용 라디오 방송인 ‘시오카제(しおかぜ)’를 통해 정부 메시지를 송신하고 있다. ‘ふるさとの風’ 「고향의 바람」(일본어), 「일본의 바람」(한국어) 채널을 운영하면서 주파수 증가, 출력 증대 및 시간 범위 확대를 도모해 오고 있다. 북한에서의 청취 기회의 확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미국의 대북 라디오 방송국인 미국의 소리(VOA)와 자유아시아방송(RFA), 그리고 미국 글로벌 미디어청(U.S. Agency for Global Media)과 제휴하여 공동 프로그램 제작이나 북한 인권침해 문제 제발 주간, 정부 주최 국제 심포지엄의 라이브 중계 등을 실시해 오고 있다.⁴⁷⁾

일본과 미국 중심의 인도태평양 연대가 점차 구체화되기 시작하면서 대만, 북한에 대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기존의 대면 오프라인 네트워크 외교가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이미지와 상징성을 강화한 온라인 매체가 기존 매체와 함께 네트워크 외교로 나타나고 있다.

47) 国会會議録(2021), No.053.

3. 특정목적의 이슈와 아이덴티티 강화

1) 대만문제에 대한 입장

미중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일본의 대만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 2021년 3월 상원 청문회에서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 필립 데이비슨 제독이 2027년까지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수 있다고 발언하여⁴⁸⁾ 일본 내에서 대만 문제에 대한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자민당 내 국방위원회와 외교위원회를 중심으로 ‘대만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이에 8월 27일 자민당과 대만 집권 민주진보당 간의 2+2 회의가 처음으로 개최되었다.

2010년 이후 일본과 대만의 관계는 외교관계는 단절되었지만 양자 간 특정 목적을 위한 조약을 통해 관계가 지속, 발전되어 왔다. 항공 운송에 관한 일본-대만 협력(2011년), 일본-대만 투자 조약(2011년), 일본-대만 어업 협정(2013년), 일본-대만 조세 협정(2015년) 등이 연이어 체결되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대만은 일본에 200억 엔을 지원했고, 일본 정부가 2021년 대만에 백신을 공급하는 백신외교로 양국 간 유대를 강조했다.⁴⁹⁾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유엔 가입 50주년을 맞아 중국이 유엔에서 인정한 유일한 합법 대표라고 강조하였다. 미국은 회원국들에 대만의 유엔 참여 지지를 촉구했다. “대만은 민주주의의 성공 사례로 유엔과 일치하는 가치인 투명성과 인권 존중, 법치를 지지”하며 “우리는 대만을 가치 있는 파트너이자 신뢰할 수 있는 친구로 여기는 많은 유엔 회원국 중 하나”

48) Davidson, Philip S. “Statement of Admiral Philip S. Davidson, U.S. Navy Commander, U.S. Indo-Pacific Command before the Senate Armed Services Committee on U.S. Indo-Pacific Command Posture,” March 9, 2021,” https://www.armed-services.senate.gov/imo/media/doc/Davidson_03-09-21.pdf. (검색일: 2021.10.30.)

49) Kawashima Shin(2021)

라고 언급했다. 미국과 일본은 대만의 세계보건기구(WHO) 총회 참석을 공식 요청했지만 중국의 반대로 결국 무산된 바 있다.

기시다 총리는 2021년 10월 소신표명연설을 통해 “중국과는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양국, 그리고 지역 및 국제사회를 위해 중요합니다.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도 제휴하면서, 중국에 대해서 주장해야 할 것은 주장해, 책임 있는 행동을 강하게 요구하는 것과 동시에, 대화를 계속해 공통의 여러 과제에 대해 협력해 갈 것입니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대만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 신청을 환영하며 WHO 총회 옵저버 참여를 응원한다고 밝혔다.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민주주의 연대의 강화 속에 대만과의 관계는 미중 양국 관계 속에서 계속 주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2) 북한문제에 대한 입장

일본 정부는 북일관계에 관해 “핵, 미사일, 여러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하는 가운데 납치 피해자의 하루라도 빠른 전원귀국을 요구한다”는 기본 입장을 표명해오고 있다. <북한 정세에 관한 관저 대책실>에서, 관계 부처 간에 정보를 집약하는 것과 동시에, 긴급 집합 팀을 소집해 대응하고 협의를 실시해오고 있다. 미국과 G7 등 국제사회에서의 납치문제를 주요 의제로 상정하고, 국내적으로는 관련 부처들이 연계하여 범정부적으로 대응하며 일본 국민 전반에 관련 이슈를 홍보하고 확산하여 최우선 의제로 만들어나가고 있다.

특히 일본은 일본인 납치문제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일본인 납치자 문제는 특정한 목표를 상정하고 다층적인 행위자들이 연계하여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네트워크 외교가 작동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북일 국교정상화에 앞서 납치문제 해결을 선결조건으로 자리매김하면서 납치문제에 대

한 북일관계에서의 관계 전환에 아이덴티티 전환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국회의 〈북한에 의한 납치문제 등에 관한 특별위원회(北朝鮮による拉致問題等に関する特別委員会)〉에서 살펴볼 수 있다. 납치문제 담당장관인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는 다음과 같이 정부의 기본 대응방안에 대해 대답한다.

가토 가쓰노부: 제가 납치문제 담당대신으로 취임할 때에도 총리로부터 납치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범정부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시를 받은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를 들어 북-일 협의에도 경찰청 직원이 참가하고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 외무상, 국가 공안 위원장을 시작으로 하는 관계 각료와 긴밀히 제휴하면서, 관계 각 방면의 의견을 물으면서, 올재팬으로 제대로 임해 가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략) 다면적인, 혹은 다양한 행정조직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그것을 위해 노력하는 그런 생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여야 납치문제 대책기관 연락협의회에 대해서는 정부, 납치희의원 연합회 임원, 각 당 납치문제 대책 조직 대표가 자리를 같이하고 문제 공유, 자유로운 의견 교환 등을 실시하고, 초당적 대응의 강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개최해 왔으며, 납치문제에 관한 전문가 간담회는 납치문제의 해결을 위해 다양한 의견교환 등을 실시하고, 초당적 대응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모든 제언을 해주십시오.⁵⁰⁾

또한 납치문제의 행위자가 국제사회-일본정부-국회 위원회-납치피해자 가족-일본국민 전반으로 다층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일본 국민들의 이슈 확산을 위해 요코타 메구미(横田めぐみ) 사건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블루리본 캠페인, 교육 강화 등이 거론되고 있다. 2020년 6월 부친 요코타 시게루(横田滋)씨가 87세의 나이로 사망하면서 그에 대한 추모와 함께 논의

50) 国会会議録(2021), No.043, No. 125.

되기도 했다. 이즈카 시게오(飯塚繁雄) 납치피해자가족회 회장은 이날 “이렇게 오랜 기간 납치 문제를 방치해 귀국을 기다리는 가족이 한두 명씩 줄고 있다”며 정부의 납치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모테기 외무상: 위원회 서두에서도 묵념을 올린 바 있습니다만 지난주 6월 5일, 요코타 시게루 씨가 따님인 메구미의 귀국을 기다리며 서거하신 지 1년이 됩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시게루 씨의 명복을 빕니다. (중략) 시게루 씨가 생존해 있는 동안 따님인 메구미를 귀국시키지 못했다는 것은 뼈아픈 일입니다. 납북자의 가족, 모두 고통이 되어 계십니다. 납치문제의 해결에는 일각의 유예도 없다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략) 이 문제는 일본이 주체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만 미국을 비롯한 관계국과도 연계하여 모든 납치 피해자의 하루빨리 귀국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하나가 되어 힘쓰고 싶습니다.⁵¹⁾

가토 가쓰노부 장관: 납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가 주체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것이 당연하지만, 나아가 국민 여러분이 한마음으로 모든 납치피해자의 하루라도 빠른 귀국을 실현하기 위해 강한 의사를 표시해 주시는 것, 이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방지 대책을 적절히 강구하면서 전국 각지에서 영화나 애니메이션 등의 상영회, 집회, 무대극 등을 개최하는 등 여론에 호소하기 위한 다양한 대응을 실시하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또, 작년 10월에는, 국제 발신 비디오 메시지를 공표하고 12월에는 웹 발신을 병용하면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국제사회를 향한 홍보 활동에도 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달 하순에는 납치 문제에 관한 유엔 심포지엄을 온라인으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중략) 학교의 교육 현장등도 통해 그러한 젊은 층도 포함하여 홍보에도 한층 노력해 가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⁵²⁾

51) 国会會議録(2021), No.159.

52) 国会會議録(2021), No.171.

모리 나츠에(森夏枝): 저는 납북자가족연락회, 특정실종자문제조사회 여러분을 만나고 나서 블루리본배지를 달고 계속 왔습니다. 이 블루리본배지는 의원배지와 마찬가지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1년 동안이나 의원배지를 달 때는 반드시 달아왔습니다. 미일 2+2에서 블링컨 국무장관과 오스틴 국방장관이 블루리본 배지를 착용하고 회담과 회견에 임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바이든 정권의 납치 문제에 대한 강한 메시지를 느꼈습니다.

납치를 모르는 세대도 많이 있습니다. 영화이든 무대이든 더욱더 홍보 계몽을 해주시고, 납치라는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중략) 국민적인 활동에 이 블루리본운동이라는 것을 좀 더 전국적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중략) 국민 모두가 납치에 관한 일을 생각하고 임하는 그런 이벤트 같은 것이 있으면 좋을지 생각하는데요, 이제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납치문제를 최중요 문제로 하여 대신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과 협력하여 전원 귀국을 향해 국민 전체가 대응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⁵³⁾

납치 피해자 일본인이 점차 고령이 되어가고 있으며, 이 문제에 대한 전국민적 홍보와 젊은 세대로의 교육 강조는 일본군‘위안부’문제에서 강조해왔던 한국의 발화와 유사해 보이는 부분이 있다. 납치피해자 일본인이라는 아이덴티티가 부각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시아와의 관계에서 일본이 가해자 아이덴티티에서 벗어나 피해자 아이덴티티로 전환할 수 있는 문제라는 점에서 북한문제는 일본 외교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되며 중요하게 다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이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핵·미사일 문제해결과 결부되어 있어 일본인납치자문제는 당장 해결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제를 끌고 가는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기존의

53) 国会會議録(2021), No.162, No.172.

일본 외교의 제약과 전후 레짐의 탈각을 모색할 수 있는 의제라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언급하고 활용하는 의제로 부각될 것이다. 또한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을 모색해가는 과정에서 일본의 네트워크 외교의 특징이 강화되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V. 결론

미중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일본의 주변국 외교는 대만문제와 북한문제에 대한 미국과 동류그룹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센카쿠 문제와 중국의 안보 위협에 대한 강경한 대응과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자 문제에서만큼은 일본이 미국을 주도적으로 설득하며 대만, 한국 등 관련 국가와의 연대와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미중경쟁 속 일본의 입장을 확인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복합 연대를 공개적으로 밝히며 일본의 아이덴티티를 재규정하며 뜻을 함께하는 국가들과의 연대를 강화해나간다. 일본의 외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변국 네트워크 외교가 발현되고 있는 것이다.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지역구상이 구체화되고 중국과 러시아의 연대 역시 강화되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중국과 대만 간의 충돌 가능성이 언급되고 미국은 대만에 대한 외교안보적 차원의 협력의 의지를 점점 더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대만 문제에 대한 일본 내 친 대만파의 목소리도 나타나고 있으며 일본은 FOIP에 기반한 보편적 가치, 인권, 법의 지배, 민주주의를 일본 외교의 핵심 가치로 내세우고 중국에 대한 인권, 민주주의 대항 연대가 형성되고 있다.

북일관계에서는 일본은 납치자 문제를 최중요 의제로 설정하고, 기존의 공식 외교라인 뿐만이 아니라 국제사회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의제설정을

주도해나가고 있다. 납치자 문제는 일본의 피해자로서의 아이덴티티를 강화하면서 북일관계를 전환시킬 전제조건이자 가능성의 영역으로 남아있다는 점에서 일본 외교의 전략적 의제이다. 납치자 문제에 대한 한국의 협력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남북일 간 관계를 재설정하고 남북관계 및 한일관계를 개선시킬 수 있는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나가야 한다.

1990년대 이후의 북일 협상을 돌아보면 대부분 일본의 이니셔티브에 의해 회담이 시작되었고, 이 과정에서 일본 총리의 리더십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⁵⁴⁾ 한국은 북한과 일본의 납치자 문제 해결과 국교정상화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한반도의 미해결된 과거사 문제를 마무리할 기회가 남아있다. 한일관계가 원만하지는 않지만 일본의 전략적 의제인 납치자 문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북일 국교정상화와 한반도 프로세스 과정에 일본과 연계하여 접근하는 전략을 구상해 볼 수 있다. ‘북한’을 고리로 관계 개선을 도모할 가능성이 남아있어 중장기적으로 남-북-일 3자 협의체를 통한 대화와 미래 전략 구상이 필요하다.

오늘날 외교는 개인, 소집단 중심 외교에서 네트워크 외교로 전환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직접적인 대면 접촉이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화상회의 및 SNS를 통한 온라인 네트워크의 중요성도 증가하고 있다. 한일 네트워크 외교는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고 있고, 미국을 중심으로 가치를 강조하는 민주주의 연계가 강화되고 있으며, 북한과 중국과는 특정 목적을 중심으로 연계하는 복합 국제 네트워크 외교가 이루어지고 있다. 미중 경쟁의 구조 속에서 일본은 중국, 북한과의 관계에서 미국과 유사하면서도 미국을 활용하는 일본

54) 전진호,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과 북한의 체제전환」, 『국제정치연구』 21(2), 2018, pp.152~153.

주도의 네트워크 외교도 가동하고 있다. 가치 연대에서 불분명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한국은 대만문제와 북한 문제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일본의 아시아 네트워크의 움직임을 면밀하게 분석하면서, 주변국과의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지역 질서의 재편 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야 할 것이다. 日本空間

논문 투고일 : 2021년 10월 30일

논문 심사일 : 2021년 11월 18일

게재 확정일 : 2021년 11월 30일

참고문헌

- 고모다 마유미, 「한일 ‘안보경협’ 분석: 역사적 전개와 이론적 함의」,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 박경민, 「한일관계와 의원외교: 한일의원연맹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박진희, 「한일 국교수립과정에서 ‘한일인맥’의 형성과 역할」, 『역사문제연구』 제9호, 2003.
- 박철희, 「정치네트워크의 부침으로 본 한일 협력과 갈등」, 『일본비평』 12, 2015.
- _____, 「한일 간 정치네트워크의 변천과 한일정치협력」, 부산대학교 일본연구소 편, 『한일관계의 종합분석: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2003.
- 신정화, 「냉전 이후 일북 관계의 시대별 주요 특징: 동북아시아 정세, 국가목표, 국내정치세력」, 『일본공간』 19, 2016.
- _____, 「북 일관계의 발전과정과 주요현안-1993~1999년을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4(1), 2000.
- 안소영, 「한일관계와 ‘비정식접촉자(非正式接觸者)’: 국교정상화 성립 전후로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 국민대 일본학연구소 편, 『박정희 시대 한일관계의 재조명』, 선인, 2011.
- 오승희, 「아베 내각의 아시아 정책—강한 일본을 위한 아시아의 타자화—」, 『일본연구』 75, 2018.
- _____, 「아베 정권의 아시아 네트워크 외교: 고치카이, 공명당, 의원연맹」, 『정치정보연구』 22(3), 2019.
- _____, 「열린 자민당, 새로운 일본’은 가능한가?」, 『교수신문』, 2021, [http://](http://www.kci.go.kr)

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77584 (검색일:
2021.11.1.)

오코노기 마사오, 「체제 마찰에서 의식 공유로」, 현대일본학회 편, 『21세기
한일관계와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비전』, 한울아카데미, 2006.

이기완, 「김정은 정권의 대일 접근과 북일관계」, 『국제정치연구』 19(2), 2016.

이신철, 「한일 역사갈등 극복을 위한 국가 간 역사대화의 성과와 한계: 한
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활동을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 25호,
2009.

이원덕, 「한일관계에 있어서 의원외교의 역할」, 『사회과학연구』 14집, 2001.

이원덕·정미애·최희식, 「한일관계에서 ‘의원외교’의 중요성: 한일의원연맹의
역할을 중심으로」, 국회사무처 연구용역보고서, 한국의회발전연구
회, 2013.

전진호,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과 북한의 체제전환」, 『국제정치연구』 21(2),
2018.

최상용·신각수, 『한일 관계의 어제와 내일을 묻다』, 제이앤씨, 2014.

최은미, 「한일 갈등관리 메커니즘의 역사적 전개와 구조적 변용」, 『아세아연
구』 63(2), 2020.

최준영, 「갈등 속의 한일관계와 한일의원연맹의 역할」, 『사회과학연구』 16(1),
2008.

최희식, 「김영삼 정부 시기 한일 비정부 교류 연구: 신시대 한일관계 비전 제
시를 향한 도정」, 『일본연구논총』 39호, 2014.

_____, 「전후 한일 정책커뮤니티의 생성과 변화」, 『한국과 국제정치』 31(1),
2015.

한일신시대공동연구프로젝트, 『신시대 한일 협력 7대 핵심과제』, 한울, 2013.

_____, 『한일 신시대'를 위한 제언: 공생을 위한 복합 네트워크의 구축』, 한울, 2011.

한일포럼 편, 『한일포럼 제3차 회의 보고서』 한일포럼, 일본국제교류센터, 1995.

C. Wei, “Between club diplomacy and network diplomacy: Exploring the diplomatic role of cities in China since 2012.” *The Hague Journal of Diplomacy* 8(3-4), (March, 2021)

Davidson, Philip S. “Statement of Admiral Philip S. Davidson, U.S. Navy Commander, U.S. Indo-Pacific Command before the Senate Armed Services Committee on U.S. Indo-Pacific Command Posture,” March 9, 2021, https://www.armed-services.senate.gov/imo/media/doc/Davidson_03-09-21.pdf. (검색일: 2021.10.30.)

K. L. Corrie,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Using Technology in Network Diplomacy”, *Digital Diplomacy*, Routledge, 2015.

Kawashima Shin, “The Japanese Government’s Shifting Rhetoric about Taiwan and Its Significance”, https://theasanforum.org/10882-2/?fbclid=IwAR33Zoem_IHYDzUWVlrQeWHYkcQR7RjVXvYiGvpPIp5icXquu8UlrTcWh9k#2(검색일: 2021.10.30.)

The White House, “Joint Leaders Statement on AUKUS”,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1/09/15/joint-leaders-statement-on-aukus/> (검색일: 2021.10.30.)

The White House, “Joint Statement from Quad Leaders”, <https://www>.

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1/09/24/
joint-statement-from-quad-leaders/(검색일: 2021.10.30.)

아베晋三チャンネル, [https://www.youtube.com/channel/
UCvTUIYhJ6p_O0SpvNSyEgKQ](https://www.youtube.com/channel/UCvTUIYhJ6p_O0SpvNSyEgKQ) (검색일: 2021.12.1)

Twitter, @AbeShinzo, <https://twitter.com/abeshinzo> (검색일: 2021.10.30.)

Twitter, @KishiNobuo, <https://twitter.com/KishiNobuo> (검색일: 2021.10.30.)

井上正也, 『日中国交正常化の政治史』, 名古屋大学出版会, 2010.

国会会議録, 「北朝鮮による拉致問題等に関する特別委員会」, 第204回国会
衆議院 北朝鮮による拉致問題等に関する特別委員会 第3号 令和3年
6月11日, [https://kokkai.ndl.go.jp/#/detail?minId=120405253X
00320210611¤t=1](https://kokkai.ndl.go.jp/#/detail?minId=120405253X00320210611¤t=1) (검색일: 2021.10.8.)

外務省, 「外交青書」, 2008. [https://www.mofa.go.jp/mofaj/gaiko/
bluebook/2008/pdf/pdfs/2_1.pdf](https://www.mofa.go.jp/mofaj/gaiko/bluebook/2008/pdf/pdfs/2_1.pdf) (검색일: 2021.11.1.)

外務省, 「外交青書」, 2013. [https://www.mofa.go.jp/mofaj/gaiko/
bluebook/2013/pdf/pdfs/2_1.pdf](https://www.mofa.go.jp/mofaj/gaiko/bluebook/2013/pdf/pdfs/2_1.pdf)(검색일: 2021.11.1.)

外務省, 「外交青書」, [https://www.mofa.go.jp/mofaj/gaiko/
bluebook/2021/pdf/pdfs/2_2.pdf](https://www.mofa.go.jp/mofaj/gaiko/bluebook/2021/pdf/pdfs/2_2.pdf) (검색일: 2021.12.28)

大竹弘二, 「戦鬪的民主主義の現在: 多文化時代の民主主義防衛(自由民主主義の再検討)」, 『年報政治学 2020』2, 2020.

岸田文雄公式サイト, “「信頼」と「3つの覚悟」に基づいた外交・安全保障”,
[https://kishida.gr.jp/wp-content/uploads/2021/09/20210913-
記者発表\(外交\).pdf](https://kishida.gr.jp/wp-content/uploads/2021/09/20210913-記者発表(外交).pdf)

Abstract

Japan's Network Diplomacy with Neighboring Countries: Dilemma over Issues of Taiwan and DPRK amid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Seung-hee, Oh

This study analyzes the changes in the Japanese government's network diplomacy with neighboring countries amid the outbreak of COVID-19 and intensifying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Japan confirms its pos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and redefines its identity in relation to neighboring countries. While strengthening cooperation with the U.S., Japan is actively sending Japanese contexts online/offline through its expanded networks, including subtle relationships with China and Taiwan and the issue of North Korean abductions of Japanese citizens. The network diplomacy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has not been working smoothly due to the worsening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For Japan, South Korea is not categorized as a like-minded countries, but Japan calls for cooperation among South Korea, the U.S., and itself regarding the North Korean issue. While Japan and Taiwan are moving toward strengthening solidarity by emphasizing shared values, a pattern remains of emphasizing and managing relations with mainland China. Japan's policy toward neighboring countries is quite similar to the United States' Asia policy, but the Japan-led network diplomacy with

www.kci.go.kr

China and the Korean Peninsula also operates in conjunction with the United States. This paper discusses the changed characteristics and the dilemma of Japan's network diplomacy, which links its position on neighboring countries internally and externally amid intensifying international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key words

Japan's foreign policy, Japan-North Korea relations, Japan-Taiwan relations, Network diplomacy, Value-oriented diplomacy